

# 외지 건설업체의 '땀질'

발주처에서 받은 선금금 안주고 되레 계약해지 통보  
올림픽 시설공사 공동 수급 이후 수백억 적자 떠넘겨

## 도내 중소건설사 피해 잇따라

도내 건설현장에서 외지업체의 갑질이 이어지면서 도내 중소건설사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춘천의 A업체는 지난 4월 2018평창 동계올림픽 진입도로인 국도 59호선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를 수주한 전북의 B업체와 45억4,630만원의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4월20일 착공해 6월17일까지 3억9,000만원을 들여 토공사·구조물 공사를 진행하다가 현재는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원도급사인 B업체가 발주처인 C기관으로부터 받은 선금금(46억원)의 30%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업체는 "원도급사에게 꾸준히 선금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매번 묵살당

했다"며 "오히려 우리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이미 투입된 회사 자금도 날릴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계약당시 선금금 포기 각서를 썼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발주처인 C기관은 선금금 포기각서의 강요 여부와 관련법 위반 등을 검토한 후 B업체의 소재지인 전북도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강릉의 D업체도 대형건설사인 E업체와 동계올림픽 시설공사를 공동수급한 이후 적자시공이 이어지면서 회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저가투찰로 공사비 대비 실제 투입금액인 실행률이 100%를 넘어 현재는 120%에 달하면서 대표사인 E업체가 D업체를 포함한 공동구성

원에게 적자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D업체는 "1,000억원 공사의 경우 800억원 정도에 낙찰받지만 실제 공사비는 1,000억원을 넘는다. 이에 발생한 200억~300억원의 적자를 떠넘기면서 영세한 도내 업체가 휘청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내에서 진행된 각종 건설공사에 외지업체의 횡포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외지업체들은 도내 중소건설사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분할발주를 적극 추진해 도내 건설사가 단독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외지업체 난립에 지역 중소건설사 줄도산

## 피해 실태와 대책

도내 건설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하는데다 관리감독기관인 발주처는 지역업체 보호를 의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건설사는 경영난에 허덕이며 고사위기에 몰렸다.

■외지업체 '독식' =도내 건설수주액 대부분을 외지업체들이 수주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3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총 건설공사액 8조520억 원 중 외지업체 수주액은 5조3,350억 원으로 전체의 66.3%나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의 건설공사액은 33.7%인 2조7,170억 원에 그쳤으며 비중도 전년보다 1.8%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난립한 철새업체들의 지분율까지 포함하면 순수 향토기업의 건설공사액 수주액은 더 줄어든다.

■발주처 '뒷집' =도내 건설업계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각종 민원과 제도 보완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요구하고 있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이후 특수를 기대한 지역 건설업체들은 원주-강릉복선전철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20% 이상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 3조8,400억원의 공사에 도내 업체 수주액이 7,68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주처의 목표로 지역업체



연도	도내 종합건설업체	건설협회 도회 회원사
2000	539	329
2002	993	469
2004	873	474
2006	1,071	618
2008	826	540
2010	723	504
2012	652	487
2015 6월 현재	608	466

(자료:건설협회 도회)

지난해 건설공사액 8조520억 중 도내 업체 수주 33.7% 그쳐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 참여 비율 확대 요청도 의면 당해  
설 곳 잃은 종합건설업체 수 9년 만에 1,071개→608개 급감

참여율은 각 공구별로 5~10%에 그쳤다. 하도급 업체의 현안인 동계올림픽 공사 지역 하도급 확대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명문화 등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의면받고 있다.

■도내 업체 '허덕' =이 같은 환경에 도내 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하도급 실적 중 도내 업체 수주금액은 외지업체의 6분의 1 수준인 15.1%(6,243억원)에 그쳤다. 공사

1건당 평균 하도급 금액도 외지업체보다 10억원이 적은 4억3,865만원에 불과했다. 도내 전체 종합건설업체 중 올해 1~6월 수주금액이 '0'인 업체도 전체의 23.7%인 144개사에 달하면서 업체 수는 2006년 1,071개사에서 올해 현재 608개사로 9년 만에 절반이 됐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외지업체의 난립과 발주기관의 제도 보완이 지지부진하며 도내 영세 건설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